

정책제안서 요약

2018. 5

환경운동연합

[전국 공통]

1.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, 시민 건강은 두 배로

가.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, 사각지대를 없애자

-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

나.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% 이상 올리자

-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% 이상 확대(서울은 70%)
-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
-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% 달성

다.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

-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(3~6월)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
-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,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
-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
-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
-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
-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,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

라.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, 지자체가 책임지자

-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
-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
- 어린이집, 학교,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
-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(교통경찰, 환경미화원, 건설노동자 등)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
-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

2.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, 공원을 지키자

가. 지방재정 확보

- 지방채 발행
- 기금/순세계 잉여금 활용

나. 도시공원구역 지정

-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
-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

다.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

- 토지매입
- 임차공원제도 도입 / 재산세 감면
-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
-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/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

3.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

가.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

-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
-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
- 지역에너지전환,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
-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,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
- 초.중.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,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

나. 재생에너지 확대

-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
-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
-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, 주민,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
-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,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
-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계획입지 발굴

다. 원전은 줄이고, 안전은 높이고

-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
-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
-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

라. 미세먼지,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

-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(1~6월)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
-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
-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

4.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

가.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

-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,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

나.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

- 댐, 보, 저수지, 하굿둑의 철거
- 물순환 도시 구축

다. 유역관리 하천관리

- 유역협의회 구성
-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, 소유역 수계도 제작,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
- 상수원 보호
-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

5.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

가.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

-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
-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

나.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

-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
-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,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

6.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

가.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- Upcycling Korea

-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
- 수집,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
-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

나.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

-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
-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

강원도

1.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도권과 연계한 제도적·행정적 연계사업

- 수도권 및 중부권역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'중부지역 미세먼지 대책협의회' 구성 및 운영
- 수도권 및 중부권역 연계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총량관리지역에 강원지역 주요도시 포함'을 위한 제도개선사업
- 강원도 및 중부권이 수도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되고 있는 객관적인 조사 및 연구 사업
- 강원도 및 중부권이 수도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홍보사업

2. 산림생태계 위협하는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· 풍력) 입지제한 및 제도강화

- 개발행위 지역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0~25°일 때 또는 임목축적도가 100~150%인 경우 특별관리 추진
- 개발행위 지역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0~25°일 때 25°이상의 측량구획을 개발행위 지역에서 자동으로 배제함.
- 환경영향권의 개념을 포함하는 강원도 환경기본조례 개정
-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

3.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권 신설 및 환경기본조례의 개정

-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영향권 삽입
- 환경영향권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-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 신청 시 주민설명회 필수 진행 및 영향권 내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류 포함.

4. 환경관련 사업장의 실시간 측정 자료 (TMS) 공개

- TMS 사업장의 자료를 조건 없이 즉시 공개

5. 동해안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

- 화력발전소 대기질 TMS 자료의 즉시 공개
- 동해안 대기총량관리지역 선포
- 동해안 대기총량관리지역 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

- 동해안 대기총량관리지역 운영을 위한 조사용역

6. 동해안 고층빌딩 등 경관위해 및 난개발요소 저감을 위한 제도의 도입

- 해안경관지구의 법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해안경관지구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용역 발주
- 해안경관지구 관리를 위한 강원도 경관위원회 구성 및 보완

7. 도암댐 철거

- 도암댐 철거 2018년 연내 발표

8.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저감 정책의 도입과 사업

-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제정
- 유해화학물질 저감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
- 유해화학물질 저감과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조사사업

경기도

1. 경기도 생활계 폐기물 정책은 생산에서부터, SRF(고형폐기물연료)은 마지막 수단

- 폐기물 감량
 -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억제
 - 재사용 확대
 - 분리수거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도입
 - 물질 재활용 확대
- SRF 정책
 - SRF 제조 사용 시설 입지
 - SRF 제조시설 품질관리강화
 - SRF 사용 시설 관리 강화

2.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

- 마트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업소에 경기도차원 소비자용 유해성정보 게시
- 세부시책을 포함한 '경기도 화학물질등록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', '경기도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' 수립
- 생활화학제품 속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관리, 단속, 피해신고 접수, 실태조사, 제품의 정보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구축, 전문인력 확충
- 환경부, 고용노동부,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제품정보 상시 제공 창구 마련
- 규제기준 초과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경기도차원의 일상적인 실태조사, 단속
- 생활 속 안전한 화학제품 구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예산 편성
- 학교 화학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체적으로 마련
- 학교, 어린이집 등 건축자재, 가구류, 완구류의 발암물질, 환경호르몬 조사 및 제거(특히, 환경호르몬, 유해중금속 함유 가능성 높은 PVC 플라스틱 사용 자제 정책마련)
- 기존 사용 제품들은 안전한 제품으로 대처
- 기초 지자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찾기, 피해자지원 예산배정
- 화학물질 감시, 화학사고 대응, 지역알권리 조례 제정
- 경기 권역별 화학물질 이동량, 배출량 공동관리계획 수립
- 화학물질관련 정보 제공 현황 공개하여 불량사업장 라벨링(업체 정보 홈페이지 게시 등)
- 경기연구원에 경기도 화학물질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지원
- 정보공개에서 누락된 중소, 영세 화학물질취급사업장 파악
-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저감 계획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
- 제출을 거부하거나, 내용이 미약한 사업체 공개
-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인근에는 발암물질 대기모니터링 강화
- 경기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건에 대한 재심사 민간위원회 설치

3.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경기도

- 미세먼지 대책은 배출량 저감정책 중심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.
- 수도권 광역국토청을 신설하여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 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.
- 비위험시기(6월~11월)는 승용차 5부제, 위험시기(12월~5월)는 2부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
- 특별교통대책지역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인구와 교통밀집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여,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수송 분담률 조정
- 수도권의 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- 대기측정망의 공간분포를 조정하여 배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원과 영향추이를 분석해야 함.
- 대기측정망 높이를 도민의 생활 눈높이로 조정하여 어린이, 노약자 등 민감군이 미세먼지로 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철도와 도로방음벽, 고가차도 유희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와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야 함.
-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.

- 경기도내 2만 여개로 추정되는 소형 사업장에 대한 대책 수립
- 불법소각에 대해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개편을 통한 마을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여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야 함.

4.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= 도시 숲과 비례

-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함.
- 중앙정부의 정책수립(판단)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, 도시공원 조성비용의 국고지원
-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, 인센티브 제공

5. AI, 구제역 예방의 시작은 동물복지농장의 확대

- 배터리케이지, 감금틀, 강제환우 완전금지
- 동물복지 인증 이상의 인증
- 예방은 철저히, 살처분은 신중하게

6. 임진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DMZ 일원 보전대책 마련하라

- 하천부지 논의 친환경농업전환 지원
- 어민들을 하천지킴이로 위촉하여 오염감시 인력으로 육성
- 민,관,군 협동으로 임진강 어족자원 조사를 하여 생태계 회복과 보존 및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
-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비로 30억 예산편성
- 장단반도를 포함한 임진강과 주변 논을 보전하고 통일로 국도변을 중심으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토지 이용
- 문산지역 하수관거 확대 개선과 임진강하구 유역 배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 해소

7. 2,500만의 생명수 팔당상수원

- 상수원 관리를 위한 종합적 유역 프로그램 마련
- 수 생태계를 위한 방안 마련
-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

8. 화성호를 재자연화하라

- 매립 계획 즉각 중단 및 적극적인 갯벌 복원, 그리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

- 화성호 해수 유통을 위한 역간척
-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시민과학 적극 지원 및 활용

경상남도

1. 공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품는 도정

- 공해문제 관련 피해 경남도민을 위한 한시적인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평가 후 대책 마련
- 주민의견 수렴 관련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
- 경상남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
- 도민의 환경권 보호와 원활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

2. 경남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

- 도민의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선
- 경남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성석탄화력발전소, 남해가스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발전소로 전환
- 미세먼지 발생원(삼천포화력발전소, 하동화력발전소 등) 조사, 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(오염원별 감축목표이행계획)마련,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대책마련
-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시군별 빠짐없이 확충 및 악취 등 주민민원이 있는 공장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
-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: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세제감면, 인센티브 확대, 지하철 정액제 부활 및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,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% 할인, 도시계획에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적극 도입, 대중교통전용지구도입, 버스전용차선 확대
- 농촌지역 쓰레기 노상소각문제 적극 대응(생활쓰레기분리배출 교육 및 시스템 구축)

3. 도민의 젓줄 낙동강의 4대강 사업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

- 경남의 하천·강·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조사 및 대책수립
-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상하류유역민 및 민관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 개선
-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물환경보전조례 제정
- 남강댐물 및 지리산댐 부산경남 식수공급정책 백지화하고 우정수 및 강변여과수 적극 개발
- 경남도민의 젓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4대강사업 보 철거 및 재자연화계획 수립
- 낙동강 지구지정계획 전면 재검토
- 안심할 수 있는 낙동강 상수원

- 물이용부담금 납부 필요성 및 이용계획 재검토

4.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정책 개선

- 지보전법, 자연환경보전법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
-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지역은 개발을 제한
- 산, 강, 하천, 호소, 연안의 지속성을 저해(거제 산양천 보설치)하거나 경계지점(수변, 해안선 등)에 대한 개발은 제한
-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은 안내판설치 및 정밀조사 실시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지정 추진
- 도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센터 건립
- 경상남도 보호구역지정 추진
-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후에 멸종위기생물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는 근거조항 마련

5. 수산자원의 보고, 해양생태 보전

- 경남도 공유수면매립계획(진해 와성만, 거제 해양플랜트, 창원 로봇랜드,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)과 해안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재검토
- 지역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난개발을 억제,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및 6차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
- 육역과 해양의 생태계 연계성 확보와 복원을 위하여 자연해안선 복원
- 경남도 해양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

6.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

- 경남지역에서 추진되는 하천생태복원사업, 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방향 재검토
-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, 천변저류지,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 적극 고려
-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해야 하며,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
- 하천법, 소하천정비법 관련 조례 제정

7. 자연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

-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환경문제 대응
- 경상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 개선
- 가지산도립공원 및 영남알프스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
- 지리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지리산담 및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백지화

8. 사곡만 매립,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지화

- 해수욕장과 갯벌 100만평 신규매립 반대 / 유희산단 및 승인 후 미개발 산단 활용
- 통영, 고성, 진해 등 경남지역 전체 상황 종합적 검토
- 난개발 악법 ‘산업단지간소화특례법’개정 필요

9. 탈핵 · 에너지 전환

- 원전과 방사능 대책을 전담할 담당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
- 방사능유출시 조기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: 방사능방재대책법
- 공동주택 태양광보급 사업 추가 및 확대,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
- 공공기관 옥상 및 주차장 태양광설치 확대
- 지자체별 전력 소비 절약목표 설정, 공공기관별 전기소비 통계, 공공기관 전기요금 예산 축소
- 방사능방재조례,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, 에너지조례 제정

광주광역시 · 전라남도

- 한빛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
- 제3순환도로 전남 나주 광주-화순, 화순-담양 간 건설 구상 폐기
- 섬진강 유역보전을 위한 물순환 정책 적극 실행
-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하굿둑 해수유통, 승촌보 죽산보 철거 검토
- 무안신안갯벌 국립공원 지정
- 백운산 생태경관보전지구 확대
-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

대구광역시 · 경상북도

1. 4대강 사업 낙동강 문제

- 달성군 농민들이 우려하는 농업용수 공급 문제는 양수장의 양수구 조정을 통해 해결
- 낙동강 상류 6개 보 중 일부 개방

2.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

- 대구 취수원 이전이 아닌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 선행
- 구미시 유해화학물질을 철저히 감시하고, 구미산단의 오폐수를 역외 처리

3. 미세먼지 문제

- 차량 2부제 실시
- 일상적 관리 방안으로 자전거전용도로 확보

4. 공원일몰제 문제

-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가능지 우선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
- 공공성에 기반한 공원조성에 우선 예산 배정
- 도시공원구역제도, 녹지활용계약, 임차공원 등 다양한 수단 적극적 활용

5. 환경교육 활성화 위한 직제 개편 필요

-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

6. 석포 영풍제련소 문제

- 낙동강 수질 안전을 위해 영풍제련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, 영풍제련소의 이전 및 폐쇄 방안 강구

대전광역시

1. 대전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

- 대전시 미세먼지 일평균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기준강화
- 대전시 상황을 공유하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
-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정책의 설계과정과 시민홍보를 협력적으로 진행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
-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보급 등을 통해 마을단위의 실시간 측정을 가능케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(학교, 주민센터 등)
- 미세먼지 대피 장소 지정

- 미세먼지 발생원, 인체에 미치는 영향, 대처방법 등의 환경교육 시스템 마련

2. 금강정비사업 수문개방 이후 준비

- 수문개방이나 보 철거 이후 문제될 농업용수문제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
-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백제보 수막재배의 경우는 대형관정 등을 파는 등의 대책이 필요
- 통합물관리가 속히 진행되어 유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필요
- 수계를 통합함과 더불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금강의 관리체계에 협력구조를 마련
- 환경부, 수자원공사, 충남도 등 기관별 수질, 생태모니터링을 통합하여 관리하고, 멸종위기 종의 보전방안 마련
- 수문 개방 이후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집행

3. 대전의 원자력 밀집 시설의 안전망 구축

- 미비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
- 현실적인 방재대책과 주민소통방안 마련
- 건강역학조사 및 손해배상 시스템 마련

부산광역시

1. ‘기후에너지환경국’ 직제 개편 및 환경부시장제 도입

- ‘기후에너지환경국’ 직제 개편
- 사회. 환경부시장 운영

2. ‘미세먼지 프리, 숨쉬는 부산’

- 미세먼지를 1급 발암먼지로 규정
- 대기분야의 예산 확대
- 발암먼지 측정소 23곳을 전면 재조정하고, 측정소 재설치
- 비상저감조치 시행
- 취약계층에 발암먼지 지원체계 강화
-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
-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및 수도권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

3. 핵없는 부산, 안전한 부산

-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(신고리 4,5,6호기)
-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(고리 2,3,4호기)
- 위험거버너스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

4. 시민 주도의 3030으로 '에너지 전환도시 부산'

- 부산형 발전채액지원제도 (FIT) 도입
- 부산시 에너지공사 설립 및 16개 구·군의 지역에너지센터 건립

5. 시민 대상 환경교육 강화

- 일상적인 생활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마련
- 학교 현장에서 환경 교육 일상화 필요
- '환경교육진흥조례' 개정 및 강화

6. 공원일몰제 아웃, 도시공원 공유

- 중앙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 경주
- 부산시민 1인당 공원면적 9.0m² 이상으로 확대
- 민간공원조성 특례화 사업 재검토

7. '쓰레기 제도 부산'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예산 확보

-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매년 2%로 상향 조정하고 일일 발생량을 3,000톤 미만으로 낮추는 4개년 계획 마련

8. 자원순환시설 부산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운영

- '자원순환사회 부산' 실행위원회 설립
- 16개 구군으로 협치조직 확대

서울특별시

1. 한강 복원의 시작은 물길 복원부터

- 서울시 주도로 한강하구종합대책 제안
- 여의도 선착장 등 관광자원화 사업 전면 재검토
- 한강사업본부 기능 재편

2.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

- 석면 제거과정의 매뉴얼 세분화
- 전문 석면 제거업체의 관리 강화
- 민관 협력 조사 및 감시망 구축

3. 일회용 빨대 없는 서울 만들기

- 일회용품 라이프사이클 통계시스템 마련
- 일회용품 사용 매장의 책임회수제 도입
- 일회용품 안 쓰는 지역&마을 만들기 강화
-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

4. 도시, 마을에서의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미세먼지 문제해결

- 기초단위 미세먼지 배출특성 조사 및 정책 시행을 위한 데이터 구축
- 정부, 지자체, 자치구별 미세먼지 대책 역할 분담과 역량 강화
- 지속가능한 수송수단의 수송분담률 상승방안 마련
-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 개선 및 체감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정책수용성 확대
- 중앙버스차로, 지하역사 등 미세먼지 주요 오염지역에 대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제공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
- 인체유해성 기반 정책 마련

5. 도시의 기본 환경권! 위기의 공원을 지켜라!

- 도시개발특별회계 내 공원조성 및 보상 예산의 비율을 30%로 고정하고, 별도의 지방재정 확보
- 2020년 이후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방안과 전체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 수립
-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비과세
-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% 감면
-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실효 배제 · 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
-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% 지원
-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 공원에 30%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단
-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

-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
- 공원녹지세 도입

6. 핵 없는 사회, 서울이 시작해야 한다

- 시민참여활동 활성화
-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소 확대
- 태양광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정책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
- 에너지 절약 및 전환 교육 확대

세종특별자치시

1. 미세먼지 줄이기 10대 행동계획 수립

- 국가기준보다 강화한 지역 대기환경 관리기준을 마련
- 대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으로 실질적인 오염 저감과 사업장별 자체 기준 마련과 관리 유도.
- 맑은 세종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오염방지 10대 행동계획을 수립, 거버넌스(가칭 맑은 세종위원회)를 운영하여 민관산 협력과 행동을 도모.
-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 및 유도
-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행
- 교육과 홍보 활성화
- 미세먼지, 자외선, 오존 전광판 설치
- 나무 심기 및 미세먼지 저감 조경 시행

2. 난개발 방지 생태도시 만들기

- 성장관리방안의 범위를 조치원, 세종 북부지역까지 확대
- 민관협력체계를 구축, 난개발방지 거버넌스 운영
- 담당부서 확대와 현장성 강화,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 운영
- 공식적인 감시 체계화와 신고제도 도입 (관련조례 개정)
- 도시계획조례 강화, 계획허가제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도 강화
-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지도(Biotop-Map)를 제작하여 가이드 라인 마련, 관리

3. 금개구리 중앙공원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

- 중앙공원(2단계)을 지금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유지, 관리
- 인공적인 공원 개발이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
-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을 위해 환경단체, 생태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공원추진협의회 운영

4. 미호천과 금강의 복원

- 우리지역 4대강사업의 상징인 <세종보> 수문개방 촉구
- 세종보 수생태계 복원 연구용역 및 시민모니터링 실시
- 지방하천, 소하천의 수중보 실태조사와 목적을 다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수중보 철거계획 수립
- 세종시 하천위원회와 같은 하천 거버넌스를 설치하여 생태하천 복원과 시민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, 마스터플랜, 로드맵 마련

5. 세종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수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(LCSD) 설치

- 세종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수립
-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
- 시장 직속의 '지속가능발전위원회' 설치
- 충분한 준비과정 이행 (시민토론회, 자문위, 월드카페)

울산광역시

- 신고리 4호기 운영 전, 최대지진평가 포함 최신기술을 적용한 엄격한 안전성평가 재실시
-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없는 월성핵발전소 조기폐쇄
- 핵 사고대비 실질적 방재대책 강화 및 방사능식재료 대책 확보
- '미세먼지·대기오염·발암물질 안전관리 종합지원센터' 설치
-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위한 알권리 보장
- 울산지역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확대
- 온실가스과 핵발전 위험 대안 '지속가능안전에너지종합지원센터' 설립
- 그린 에너지 신사업도시로의 도약 - 부유식 해상풍력대단지 조성
- 착한 에너지를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설치
- 시민참여형 착한 에너지 공급제도 구축

- 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 효율화로 착한 에너지 그린 잡 창출
- ‘울산지방환경청’ 신설
- ‘울산생태자원은행’ 설치
-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- 직매입 등 치밀한 준비
-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 원전 재검토와 영남알프스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
- 수족관 돌핀 프리와 생태관광 활성화
- ‘울산생태관광센터(혹은 울산생태관광공사)’ 설치
- 고교무상급식을 통한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실현
- 지역 안심먹거리 푸드시스템, 푸드 커뮤니티, 공공형 먹거리 정책
- 농민복지 강화

인천광역시

1. 녹색구매 · 녹색소비 확산

- 인천시 녹색제품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
-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「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」 설치
- 민간부문 녹색소비 · 녹색구매 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내실화

2. 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

- 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
- 관내 초·중·고 등 공공급식 시설에서 Non-GMO식품 사용 시범사업 실시

3. 생활화학제품(물질)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안전 확보

- 생활화학제품(물질)의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
- 세탁소, 이미용실, 청소관리업체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클린사업장 전환 지원

4. 미세먼지, 악취와 소음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

-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민관대책위원회 확대구성
- <인천 푸른하늘 되찾기 추진단> 구성
- 대기질 개선사업비 확대
- 민·관·학 악취관리위원회 구성
- 소음 · 진동 관리 조례 제정

5. 쓰레기 배출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

- 인천시 자원순환조례 제정
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

6.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구축

- 에너지·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개편
- 시민참여,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
-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
-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 건설

7. 생물다양성의 확대, 보전

- 생물 다양성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
- 인천시 생물다양성 점검위원회 구축

8. 공원·녹지 조성 확대

-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
- 그린벨트의 원래 취지와 목적성에 맞는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

9.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활성화

- 인천시 교육청,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장학사제 도입
-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(단체)과 연계한 환경교육 강화

10. 건강한 물과 자연형 하천 관리

- 건강한 물과 자연형 하천 관리
-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 개선
- ‘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’의 취지 복원

11. 화학물질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

- 화학물질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
- 구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
- 산업단지 환경·안전 민관 모니터링단 구성

12. 지속가능한 인천만들기

-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
- 인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매년 사업이행점검 추진

전라북도

-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및 미집행 공원 조성 확대
-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지원
- 형식적인 ‘야생동물보호구역’을 실효성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
- 전주천 국가하천구간(삼천 합수지점~만경강) 수생태계 복원
-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 대책 및 지원
- 지역 배출원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시민 체감형(노출피해) 미세 정책 마련
-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미세먼지 조례 제(개정)정 및 범 미세먼지 저감 운동본부(민·관·학 거버넌스)구성 운영
- 미세먼지 주범 쓰레기고형연료(SRF) 시설 관리 대책 및 신규 입지 제한 등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
- 태양광·풍력 입지 제한 가이드라인 및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시민참여형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
- 한빛 원전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, 한빛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
- 지역사회, 환경 변화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
- 새만금 외해역(부안, 군산, 고창) 해양 환경 관리 정책 수립 및 대책 기구 참여
-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한 조례 제(개)정
-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및 농진청 GMO 격리포장 안전관리를 위한 농생명위원회 전라북도 참여
-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 직제 개편 및 시·도 환경교육센터 설치
- 용담호 광역상수원 안전 관리를 위한 주민자율관리 협약 제도화 및 용담댐 이해당사자 수질보전 협의회 구성
- ‘머그잔으로 주세요.’ 비닐봉투, 일회용컵, 빨대 등 업소 내 일회용품 안 쓰기 권고 및 지원과 규제, 범시민참여 캠페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.
- 자치단체 수돗물이용활성화를 위한 청사 내 공공 급수대 설치 및 조례 제정.
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에 따라 통합 행정지원으로 기한 내 완료 및 농민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. (하천 수질 오염원 저감)

제주특별자치도

1. 제2공항 문제

- 제주 제2공항 계획 전면 폐기
-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

2. 난개발 규제 강화

- 도시계획 심의 단계에서부터 환경수용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주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
- 각 등급별 행위제한사항도 보다 강화
- 심의 위원회 도의회 추천
- 난개발 우려 사업만 재심의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, 부동의 조항이 반드시 필요

3. 생활쓰레기 저감대책 강화

- 1회용품 사용제한
-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 금지
-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 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
-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이 필요

충청남도

1.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

- 신석탄화력 건설 중단, 재생에너지타운으로 전환
- 고탄연료(SRF) 사용제한 지역 지정으로 추가 석탄화력 진입 제한
-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화력 1, 2호기(1984년) 조기 폐쇄
- 대기환경보전법에 발전소도 시·도지사의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명령 대상에 포함
-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, 현행(kW당 0.3원)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준(kW당 1원)으로 인상
-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,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도입

2. 폐기물 처리업체 충남 집중 이제 그만

-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 원칙으로 해야
- 각 지역별로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 필요
- 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가와 이격거리 제한, 가축사육 제한 조례 참고
-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가 인근이 아닌 산업단지로 계획입지

3. 대산석유화학공단 환경오염 저감

-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
- 대산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

4. 지속가능한 친환경 순환형 축산

- 지역별 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퇴비·액비의 농경지 살포량 관리
- 양분관리제 도입과 함께 과밀지역부터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
- 축종별 사육두수와 지역별 직정 사육두수 설정
- 신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
- 축산업 허가제 실시

충청북도

1.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

-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
-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
- 고농도 오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
- 주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

2. 기후변화 대응, 탈핵/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시행
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및 기반 확충
- 탈핵,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
- 재생에너지 확대
- 도민대상 기후변화, 탈핵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추진

3.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

-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운영 및 위상 강화

-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제정
-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

4. 금강, 대청댐/충주댐 물관련 제도 개선

- 4대강특별법 제도 및 수계기금운용 방식 개선
- 대형댐에 관한 수리권 이전 및 이익금 환수방안 마련

5. 백두대간 보전과 속리산,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

- 한남금북정맥 실태파악 및 복원 방안 마련
- 생태계 우수구간인 (민주지산권역 등) 생물권보전지역 및 도립공원으로 지정
-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 중단